

국가 소프트웨어 이니셔티브 전략

이 남용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
(사)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회장

국제사회는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IT)의 발전과 확산으로 Global Economy, Global Market, Global Company, Global Products, Global Services가 일반화 및 보편화되고 있다. 디지털시대의 국제사회의 특징은 (1) Speed-up Management, (2) Concurrent Engineering, (3) Integration, (4) Globalization으로 요약된다. 디지털시대에 걸 맞게 국제사회의 고객들은 Global Products와 Global Services가 보다 고급화, 지능화, 다기능의 통합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즉, 지식, 절차, 노-하우, 정보, 콘텐츠,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를 기획, 계획, 제작, 생산, 관리, 이용하는 능력이 정부 및 기업의 핵심적인 경쟁력으로 부상하였다. 많은 석학들이 선진국형 국가경제 구조일수록 소프트웨어 능력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경제의 총 생산량의 35%(2001년 기준)가 소프트웨어(IT)기술의 공헌에 의한 것이다. 그 비중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수출 및 무역흑자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IT)기술에 의한 것이다. 즉, 국가경제발전은 소프트웨어(IT)기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세계최고의 핵심 소프트웨어(IT)기술을 선도해야 한다. 소프트웨어(IT)기술분야의 R&D투자를 GNP의 3%(전체는 약 6%)수준으로 확대한다. 국내의 경우 향후 5년간 GDP성장율은 6.7%, IT H/W 성장률 12.3%에 비해 소프트웨어 성장률은 H/W의 2배가 넘는 25.5%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마인드가 있는지, 이와 같은 변화에 깊은 통찰력이 있는지,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강력한 리더십과 의지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이니셔티브 전략을 강구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이니셔티브 전략을 (1) 세계최고수준의 소프트웨어 생산기술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전자정부구현으로 정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신규 소프트웨어시장을 창출하여야 한다. (3) SI산업체의 해외수출경쟁력강화와 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의 획기적인 육성정책을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 (4)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육성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5)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양성을 장기적이고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6) 소프트웨어 이니셔티브 전략을 구사하기 위하여 정부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과감하게 발굴하여 발탁하여야 한다. (7) 청와대에 IT정책수석실을 신설하여 소프트웨어 이니셔티브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1. 세계최고수준의 소프트웨어 생산기술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최근 국제조사기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생산기술(개발지원도구)과 관련된 세계시장규모는 2001년 기준으로 약 35.4억불이며, 2006년에는 약 61.9억불로 년평균 11.8%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IDC, 2002. 5. 6.)하고 있다. 특히, 웹-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시장은 2000년 약 4.1억불에서 2005에는 약 280억불 규모로 매년 급성장할(가트너그룹, 2002. 2.)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제적으로 소프트웨어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도 기업도 마인드가 없으며, 부동산에는 투자할 망정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자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소프트웨어 자산을 전략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획득, 운용, 관리에 소홀하고, 소프트웨어 권리를 보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정책이 부재하다. 예컨대, 물밑듯이 들어온 선진국의 이질적인 플랫폼-폼, 운영체제, 네트워크, 컴파일러, 응용소프트웨어패키지, DBMS 등의 제품이 우리나라 시장을 독점하지만 우리정부의 대책은 무대책이 상책으로 보는 듯한 생각이다. 예컨대, 운영체제만 하더라도 Unix, MVS, MacOS, Window, PalmOS, Rex, 내장형 디바이스로 모바일, 셀-톱박스 등의 무수히 많다. 이와 같은 운영체제를 언제까지나 주는 대로 쓰기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소프트웨어 개발플랫폼분야도 J2EE, .NET, COM++, CORBA 등이 있다. 우리정부와 기업의 대책은 무엇인가? 매년 전자정부사업 또는 기업정보화사업으로 구매한 소프트웨어간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과 이식성(Portability)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리의 정책과 대안은 있는가? 우리나라는 세계의 소프트웨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하드웨어부문의 세계최고의 IT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소프트웨어기술의 연구개발에 집중하여 자주적인 개발플랫폼, 컴파일러, 운영체제, 미들웨어, 소프트웨어생산기술 등을 개발한다면, 소프트웨어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경제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이니셔티브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최고의 소프트웨어 수출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자정부구현으로 정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신규 소프트웨어시장을 창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약 48회의 정부혁신(개혁)을 단행하였지만, 본질적으로 생산적이고 효율화적인 정부로 다시 태어남보다는 형식적인 정부조직구조변경의 수준에 불과하였다고 본다. 아직도 우리정부의

국제경쟁력은 OECD가맹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는 '오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게 생각해 볼 일이다. 일본은 전자정부에 실패하여 지난 13년간 경제의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은 전자정부 구현의 전략으로 1990년대 어려웠던 경제를 회복하고 세계패권을 다시 잡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지도자는 전자정부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가 갖춰야 한다. 전자정부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안보, 외환 등의 국가적 위기에 체계적이고 결집된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종이 없는 정부를 실현하고, 정부행정프로세스, 대국민서비스프로세스, 관련된 공공문서를 국제표준(Global Standards)에 따라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국민편의 위주로 공공부문에 전자거래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대국민 민원 및 행정서비스의 속도(Speed)를 제고하고,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 교환 및 공유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넷째, 공공부문에 동시공학개념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정부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정부기관 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와 기업간의 모든 거래에 동시공학을 적용하여 기업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전자정부의 역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예컨대,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프라이버시침해와 정보격차(Digital Divide) 등의 역기능은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보완하여야 한다. 여섯째,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전자정부는 최선의 전략이다. 전자정부를 통하여 남북의 언어, 관습, 절차, 제도, 문서 등의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일곱째, 전자정부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 공무원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며, 이를 존중하는 신공공문화를 창출하여야 한다. 끝으로, 전자정부구현사업이 국산정보기술, 국산장비, 국산솔루션의 시장창출로 승화되어야 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총투자비의 50% 이상을 국산제품을 이용하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전자정부구현사업과 재난방지시스템(DRS)구축사업의 추진으로 외국기업(Microsoft, Oracle, SAP, IBM, HP, Sun, CISCO)만을 살찌우는 접근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외국기업의 독점과 독과점의 폐해를 해소하고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50% 이상을 순수 국산을 조달하도록 공정경쟁 전략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비의 구조를 하드웨어(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등) 위주의 예산편성에서 소프트웨어(정보화컨설팅, 소프트웨어 솔루션 구매비, 소프트웨어 개발인건비, 시스템통합인건비 등) 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3. SI산업체의 해외수출경쟁력강화와 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의 획기적인 육성정책을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 과거 우리정부가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의 기간산업을 정부주도의 계획경제로 강력히 드라이브하였듯이 소프트웨어 산업도 매년 수조원대의 정부투자를 지속하여야 비로소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980년 중반에 출현한 대형SI업체(삼성SDS, LG-CNS, HIT, SKC&C, POSDATA,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등)들은 그룹사의 내수기반으로 국내 공공부문정보화사업에 집착하여 덩핑이 보편화 되고 결국에는 SI수출경쟁력의 결핍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대형SI업체에 하청으로 먹고 살고 있는 4000여 중소벤처기업은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파산 또는 경영곤란을 처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SI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은 해외수출전략일 수 밖에 없다.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국가는 선진국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라도 SI산업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수출하여야 한다. 눈 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인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전략 기술의 개발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소프트웨어산업의 돌파구는 과거와 같이 정부주도형의 강력한 소프트웨어수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IT대선공약에서 과거의 무분별한 IT벤처 거품을 제거한 후에 확실하게 옥석을 가려서 건설한 IT벤처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재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 정부가 출범하여 지난 2년간 각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경제현안을 주도 면밀하게 진단하고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문제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최근 정부는 기술혁신형 기업육성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늦었지만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하여 콜금리인하, 중소기업자금지원확대 등의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음은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어렵게 생존하는 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을 위기에서 구하여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민의정부의 IT벤처 붐의 부작용에 의한 손실도 컸지만 이를 통하여 국민에게 기업가정신과 도전의식을 고취하고 미래국가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크게 발전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IT벤처가 몰락하고 IT산업이 침체하게 된 원인은 다양하다. 먼저, IT벤처 스스로의 능력이다. 기술력이 없는 벤처기업인 및 벤처캐피탈사의 무분별한 투자와 무능한 정부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즉, 기술력은 고사하고 수익모델도 없으면서 IT벤처를 설립 및 운영하게 자금을 지원한 것이 가장 큰 화근으로 본다. 또한, IT관련 대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치 못 하고 자사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시장비용을 IT벤처에게 손쉽게 전이함으로써 약자일 수 밖에 없는 IT벤처는 몰락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국민의정부의 벤처육성정책의 운영에 전문성이 부족했다고 본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은 선진국에 비하여 체계적인 엔지니어링 접근방법이 부족하여 IT벤처가 제공하는 솔루션과 서비스를 신뢰하지 못하고 대기업 또는 선진국 제품과 서비스를 선호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건실한 IT벤처를 위기에서 구하여야 한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먹 걸이는 IT이며, 그 주역이 IT벤처라는 사실을 상기하여야 한다. 현재, 국가경제성장과 수출에 가장 큰 공헌은 바로 IT이다. 최근에 과거 10여년간 우리나라의 IT수출입국에 크게 기여한 해외수출위주형 IT벤처인 S텔레콤, T전자 등의 부도는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은 IT벤처이다. 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생명과학, 지방균형발전, 수도이전, IT839전략기술개발마스터플랜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IT벤처를 구하는 정책이 불분명하고 미약하여 유감이다. IT벤처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급청년실업(10명중에 4명이 실업자임)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고, 이미 국민의정부가 기초기술, 기반기술, 응용기술, 산업기술 등에 막대한 정부정책자금(약 2조)을 투자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다시 한번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을 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예컨대, (1)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대규모의 IT시장창출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2)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의 참여지분을 60% 이상의 일정 쿼터제로 유효경쟁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3) 1-2% 수준의 저금리로 장기적인 정책자금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IT고급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의 인건비보상제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의 지적소유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무단복제 및 불법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한다. (6) 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제값지불하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은 하이텍 산업으로 고급인력의 신규고용창출의 효과가 높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에 적합하다. 앞으로의 고용 없는 경제성장의 타개책이 바로 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육성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한 IT839 전략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육성정책이 포함되었음은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는 매우 중요한 IT기술이다. 물론, 임베디

드 소프트웨어 육성정책은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산업자원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등의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유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활용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와 관련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정보통신용 소프트웨어(Teleprocessing Software, Network Software, Middleware 등)와 정보통신기기용 소프트웨어(컴퓨터, PC, 노트북, 네트워크장비, PDA, 핸드폰 등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 산업자원부와 관련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공장자동화용 마이크로 프로세서, 컨트롤러, 다양한 ASICs 등이 있으며, 각종장치 및 기기(자동차, 선박, 항공기, TV, 냉장고, 세탁기, 전자밥솥 등)에 임베디드 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 국방부와 관련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는 전투기, 함정, 탱크, 각종 무기체계, 정보수집시스템, C4I시스템, 사격통제시스템 등이 있고, 방위시스템의 대부분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다. 문화관광부와 관련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는 다양한 게임기, 노래방기기, 자동화된 운동기기 등이 있을 것이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2005년 3월 경에 사업자 선정을 준비하고 있는 WiBro는 대표적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WiBro는 기존 무선인터넷의 낮은 전송속도와 비싼 요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4G의 기반기술(OFDM, MIMO, 스마트안테나기술 등)을 이용하는 차세대의 무선인터넷기술로 고속이동(60-100Km) 시 고속의 대용량 데이터통신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 이동전화무선인터넷의 가입비율은 93%이나, 이동전화매출액의 11% 수준이다. WiBro는 휴대형 무선단말기를 이용하여 정지 및 이동 중에 언제 어디서나 고속으로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정부는 WiBro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디바이스(단말기, 중계기 등)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미들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웨어 등의 소프트웨어기술과 제품을 국산화하였는지, 국산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는지 등을 묻고 싶다. 단지 삼성전자 등의 단말기 신규 시장창출만을 위하여 WiBro사업자 선정이라면 사업추진일정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로, 과거 비효율로 얼룩진 PCS사업자선정, 실시도 못해본 IMT-2000(WCDMA)사업자선정의 시행착오를 또다시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국방부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대부분인 대규모 무기체계구축사업(금강, 백두, 차세대전투, 미사일, 함정, 탱크, C4I, MCRC, KNTDS 등)을 군사원조시절의 고전적인 방식인 FMS방식으로 획득하여 국산기술과 제품이 활용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자주적인 국방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술능력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막대한 무기체계구축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군도 군사용소프트웨어전문가집단을 육성하고, 외부의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발탁하여 중용하여야 한다.

5.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양성을 장기적이고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는 연간 17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로 인한 공교육의 추락과 황폐화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국가사회의 분위기가 일류만 찾고 일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 놓는 사회에서는 평범한 국민들조차도 사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공계 기피현상은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선진국형의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양성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급의 국제경쟁력이 있는 소프트웨어전문인력은 단기간에 육성될 수가 없다. 고급의 소프트웨어인력을 양성함에 있어서 제도권의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 및 대학원교육이 있고, 비제도권의 교육으로 가정교육, 학원교육, 전문교육훈련, 기업교육훈련 등이 있다. 글로벌 시대의 지식정보사회에 걸 맞는 소프트웨어인재육성을 위하여 과감하게 교육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향후 소프트웨어인력수급의 문제는 전문학사와 학사인력의 수급불균형 보다는 고급인력의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급인력의 전문분야는 고급 컨설턴트, 시스템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대형 프로젝트 관리자,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시스템 아키텍트, 요소기술전문가 등이다. 이와 같은 고급인력은 제도권의 저학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육성되어야 하고, 비제도권의 기업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완성되어야 한다. 첫째, 글로벌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학년에서부터 재미 있게 세계 공통 언어인 영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이니셔티브를 잡지 위하여 고급인력이 영어능력을 겸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능력은 저학년에서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두 가지 언어를 어릴 때부터 습득하면 개념정립이 정확하여 지능도 높아지고 이해력도 매우 탁월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유치원에서부터 재미있는 영어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정규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참고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대부분의 기술과 정보가 영어로 되어 있으며, 글로벌마켓에서 글로벌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하여 영어는 필수적인 능력이다. 둘째, 사고력과 논리력을 극대화하고 복잡한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프로그래밍언어를 저 학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이 이공계를 회피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이공계에 진학하면 어려운 공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비전이 없고, 대우도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소프트웨어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히는 것이다. 프로그래밍 언어도 영어와 같은 일종의 구조화된 언어이다. 따라서 저학년에서 학습할수록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근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는 중학교 2학년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정식교과목으로 채택하여 학습하고 있다. 셋째, 대학의 운영개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주로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은 기초과학과 기초기술교육에 집중하고 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사립대학은 기반기술과 응용기술의 교육에 집중하여야 한다. 대학 및 대학원의 정원도 나눠 먹기 식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재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비제도권의 소프트웨어인력양성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다행히 정보통신부 등은 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전문교육지원사업으로 326개의 민간소프트웨어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교육기관은 비전문가의 전환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산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체인력양성이 매우 어려우며, 설령 가능한 경우에도 고급전문인력의 이직률이 너무 높아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양성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잠재적인 소프트웨어인력양성으로 소외계층이나 영재교육 등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군장병,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의 컴퓨터 활용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영재육성지원과 선도교사양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끝으로, 디지털시대에서 소프트웨어인력양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민족의 백년대계를 가꾸는 일이다. 소프트웨어인력양성정책을 개발하고 제도권 교육과 비제도권 교육의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소프트웨어인력양성은 정부주도 보다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중시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소프트웨어전문가들에게 윤택한 미래가 보장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깊은 꿈과 희망을 심어야 한다.

6. 소프트웨어 이니셔티브 전략을 구사하기 위하여 정부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과감하게 발굴하여 발탁하여야 한다. 개혁 또는 혁신의 주체(Changing Agent)에 대한 2가지 이론이 있다. 하나는 변화의 주체를 과학기술(Science and Technology)로 보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의 주체를 인간(Human-Beings)으로 보는 것이다. 즉, 국가혁신의 주체는 인물이다. 계절이 바뀌면 그 계절에 맞는 새로운 옷으로 바꾸어 입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듯이 정부도 국가혁신과 국제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인물을 과감하게 발탁하여 등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 동안 새로운 인물을 과감하게 발탁하여 등용함에 도전보다는 위험회피의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혁신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컨대, 경제분야의 인물발탁에서도 특별히 새로운 인물이 없었으며,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오히려 한 세대를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의 공모과정을 공개적으로 거쳐 추진되고 있는 정부출연기관 및 투자기관장의 임명결과를 보면 전문성을 외면하는 줄줄이 연임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관료집단이 짜고 치는 고스톱 판에 몇몇 순수한 전문가들이 들놀이 서는 형국은 정부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아무리 정권재창출이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인물을 재 발탁함으로써 과거와의 차별화는 고사하고 과거의 부정부패와 비효율을 털어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발자국도 미래로 전진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심정이다. 정권재창출 이후 지난 2년간 국가경제가 계속하여 침체의 어두운 터널로 빠져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 책임자들은 막연하게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쉽게 말과 주장을 바꾸어 정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여 국민으로부터 심한 불신과 의심을 받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소프트웨어전문가는 소프트웨어 정책의 수립, 소프트웨어 위주의 사업추진은 소프트웨어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가장 효과적, 효율임에도 그 동안 전문성이 결여된 비전문가들이 주도하여 막대한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며 소프트웨어 이니셔티브 전략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어왔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이니셔티브 전략을 구현하기 위하여 아마츄어시대를 보내고 진정한 전문가(프로)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7. 청와대에 IT정책수석실을 신설하여 소프트웨어 이니셔티브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노 무현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IT정책수석실을 신속히 신설하고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발탁하여 무주공산이 된 IT정책과 소프트웨어 이니셔티브 전략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전세계는 IT와 소프트웨어기술을 기반으로 급변하고 있다. 국경이 사라지고, 빛의 속도로 교역하며, 하루 24시간 일하는 글로벌 경쟁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세계의 각 국가는 스피드, 인티그레이션, 글로벌 라이제이션이라는 디지털 시대의 특성에 맞추어 강력한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디지털 문명은 무한한 잠재력과 무서운 성장속도로 우리 인간의 삶의 가치와 인류의 미래를 재창조하고 있다. 끝없는 기회가 있고, 꿈이 펼쳐지는 디지털 세상은 더 이상 내일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다. 이제 정보기술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한 보편적인 필수 수단이 되었고 정보기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핵심역량이 되었다.

정부는 IT국가비전을 재정립하고,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IT 및 정보화기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기획, 계획, 집행, 조정 및 통제하여야 한다. 현재의 청와대 조직에는 정보과학기술보좌실이 있으나, 이와 같은 기능을 담당할 해당부서와 인력이 미흡하다. 과거와 같이 부처간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번지는 기술연구개발, 신동력산업, 신경제성장엔진산업, 디지털방송 산업, 전자정부추진사업 등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청와대에 강력한 IT정책수석실을 신설 및 운영하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대선후보시절에 IT정책수석실을 신설하시겠다고 공약하신바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공약이 문제가 아니라 IT정책수석실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 IT정책수석은 대통령프로젝트의 기술(경영기술/정보기술)을 지원하여야 하며, 각 부처의 정보화 및 정보기술문제를 조정 및 통제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애정과 애증으로 정부에게 IT정책수석실을 신설운동해줄 것을 기대해 본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

저자: 이남용 숭실대학교 교수
(nylee@computing.ssu.ac.kr)
(핸드폰: 011-362-5656)